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결과 발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이 지난 10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243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2명이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성'

시민참여단 243명 중 찬성 191명·반대 52명... 찬성률 78%

공론화위원회, 이용섭 시장에게 찬성의견 담은 권고안 제시 예정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광주 시민의 선택은 '찬성'이었다.

광주 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건설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24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91명(78.6%), 반대 52명(21.4%)이었다. 약 40일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 찬성으로 결론이 나온 만큼 도시철도 2호선은 그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은 전날부터 1박 2일 동안 집중 토론회를 거쳐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간 찬반과 그 이유를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휴대전화 앱을 활용한 전자

투표로 1표라도 많은 측 의견을 존중하는 '단순 다수제'로 진행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단 1표라도 더 많은 쪽의 주장을 토대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제시할 권고안을 만들게 된다.

공론화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결정대로 찬성의견이 담기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표본으로 선정한 광주 시민 2천500명 중에서 찬반과 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으로 구성됐다. 남자가 122명, 여자가 128명이다.

나이별로는 20대 48명, 30대 43명, 40

대 53명, 50대 49명, 60대 이상 57명 등이다.

9~10일 토론회와 설문조사에는 시민참여단 250명 가운데 243명이 참여했다. 시민참여단은 토론회 이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속의 과정을 거쳤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정으로 이어지는 41.9km의 순환선이다.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친 뒤 논란 끝에 저속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다.

민선 6기 윤창현 전 시장 취임 후 건설 여부 재검토에 건설방식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제지리걸음을 하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공론화 방식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정승현 기자 jsh9668@

2018 광주비엔날레 폐막... 국내외 31만명 관람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6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8 광주비엔날레가 11일 폐막했다.

각계각층의 방문과 호평 속에 31만8천 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뤘다.

개최지인 광주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국내외의 반향을 끌어들였다.

2018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은 31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 광주비엔날레 관람객 26만2천500명보다 21% 증가할 수 있다.

최근 지역마다 유사한 비엔날레와 다양한 축제들이 생겨나는 환경 속에 이처럼 관람객이 증가한 것은 아시아 최대라는 브랜드 가치와 함께 광주라는 개최지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차아정 기자 chaajung@

■ 인터뷰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임선규 조합장

“낙후된 환경속에서 약15년 동안 재산권 행사마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개발사업 진행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임선규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은 현재 늦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2017년 10월 26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에 당선 되고, 동년 12월 18일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개발 반대파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년 8월 2일에 개최한 대의원 보궐 선임 조합원 총회의 신고수리를 미루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임조합장은 조합 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재개발 반대파는 어느 조합이나 있을 수 있지만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관청에서 이에 개입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들과 조합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이 당선되고, 부족한 대의원도 뽑았다.

하지만 재개발 반대파에서 서면결의서 일부가 위조됐으며,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수사의를 하고, 민원이 정리 될 때까지 관청에서 사실상 재개발업무를 중지한 상태다.

임조합장은 "재개발 반대파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관청에서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1차 수사의를 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았고, 무혐의를 받자마자 또 추가로 수사의를 하였다."며 "문제는 관청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대의원 보궐 선임 신고수리를 받아준다는데, 재개발 반대파에서 이번에도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또 수사의를 시킨다면 조합은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거나



“더 분통을 터트렸다.

“사문서위조로 수사의를 한 서면결의서를 빼고도 과반수 이상 가결이 나서 조합장 이하 임원, 대의원 선출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 직후에 관청에서도 조합설립변경 서류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조합원 총회 이후에 재개발 반대파의 민원을 이유로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수사의를 하고, 대의원 보궐 선임 신고수리를 보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임조합장은 “현재 관청의 방침대로라면 조합원 누구나 말이 되 든, 안 되는 민원을 제기 할 때마다 사업진행을 보류 하나”며 반문한 뒤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 의견이 소수에 의해 묵살되고 재산권 행사가 그대로 묶이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관청은 계림3 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의견 충돌은 정

당한 절차를 밟아 조합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임조합장은 계림3구역 내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로 인해 민·형사상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를 조합의 자율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구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수의 의견도 분명 존중해야 하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한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은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민주 국가인 만큼 조합원 대다수의 재산권 행사와 낙후된 주거환경을 조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임조합장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반대파도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을 반대했으리라 충분히 이해를 한다”며 “하지만 조합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조합 내에서 의견과 조율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져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문수 기자 zkj0000@

